

#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회산업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8. 19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 8. 28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2. 9. 22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김정보)

### 가. 제안 이유

- 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1991년)
- 0. 부산직할시 폐관 31824-196(92.3.4)호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구조례(준칙)”에 의거 조례 제정

### 나. 주요 골자

- 0. 분뇨의 수집, 운반 :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
- 0. 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 내부 청소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이행 통지
- 0.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
- 0. 비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 구청장에게 신고(지체없이 현장 조사  
시설 개선)
- 0. 수수료의 분할 징수 :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징수
- 0. 가산금 : 수수료를 기한내 미납부시 체납액의 5/100 가산금 징수
- 0. 수수료의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다하여 재력 상실자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 번 자	질 의 요 지	답 번 요 지
김한민 위원	청소 과장 김 정 보	· 정수에 대한 논란이 되어 있는 법제35조에 대한 설명 요망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는 분뇨관련영업으로서,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3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위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허성준 위원	〃	· 부칙 제2조 영업 허가 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 금정구 의회에서 어떤 내용 으로 의결되었는가를 서면 답변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낭독해 주시길 요망 함.	· 금정구 의회에서는 부칙 제2조 2항은 위원회에서 삭제한 후 의결이 되었음.

허성준 위원	청소 과장 김 정 보	· 제14회 임시회시 문제의 부결된 조항을 왜 그대로 제15회 임시회 회의에 다시 상정을 했는지 설명 요망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와 몇번 상의를 했는 결과에 따라 원안으로 제출하여 통과되는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든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떠 한 의결을 보기 위해서 협의를 하여 원안대로 제출한 것임.
김한민 위원	〃	· 15조 3항에 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역내의 현재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수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허가기간등을 규칙에 정할 수 있는지 설명 요망	· 15조에서 관련 영업 허가 는 관할구역내에 두면서 정수를 조정할때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공고등으로 일반인에게 많이 알리며 영업자의 추첨은 공개추첨으로하고 정수의 허가 기준은 별표1에 분뇨 수집·운반 업, 정화조 청소업 장비,인력,시설이 갖추어 져야한다고 정해져 있음. 다음에는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해서 허가기간 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여 정수를 정하 도록 되어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정수를 둘 필요없는 조례인데 왜 정수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지 설명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칙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어 공포가 되면 현재의 어떠한 정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때문에 정수를 정해 놓은 것임.</li> <li>· 차후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수를 조정할려면 제15조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허가기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음.</li> </ul>
김한민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다고만 하였지 정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수는 모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현시점에 몇개가 있어야 된다는 하는 규정이 되어져야만 구청장이 전에는 3개었는데, 이제는 4개로 한다.</li> <li>·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li> </ul>
이수송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수 조정 문제는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부칙 2조 제2항의 정수는 현재의 정수이지 앞으로의 정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 제2조 2항의 정수는 현재의 정수임.</li> </ul>

이수송 위원	청소 과장 김 정 보	· 부칙 제2조 2항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업자, 주민과 행정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 지 차이점을 분류해 주도록 요망함.	· 부칙 제2조 2항의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간에 업자 주민이나 행정의 3자가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상관 관계등은 실무 과장으로는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	----------------	---	--

## 5. 토론 요지

### 가. 찬 성

#### 0. 이인곤 위원

-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허가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수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정수조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사 주민여론등 불편한 사항이 있을때에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든지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0. 김한민 위원

-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수를 정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경과 조치로서 반드시 정수를 종전 규정에 의한 부칙 제2조에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고 넣어 주어야만 조례의 구색이 맞으므로 부칙 제2조 2항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됨.

#### 0. 이수송 위원

- 부칙 제2조 제2항이 없음으로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온다거나 또한 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조항의 삭제를 동의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조 2항이 업자들의 행패, 업체를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고 경과 조치 사항의 구색용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 2항은 논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며, 이 조항을 그대로 두어 구색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임.

0. 정호기 위원

-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 2항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인데 2항을 그대로 둔다고 하등의 제재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추궁을 하여 행정 처분을 왜 안하느냐 등 얼마든지 따지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나. 반 대

0. 박병화 위원

- 본조례는 지난번 본회의에 부결된 것으로서 수정없이 상정하면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부도덕한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부칙 제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0. 허성준 위원

-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지난번 회의때 부결된 안건이므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정수 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표결 결과 :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

7. 소수의견의 요지

- 지난번 본회의에 부결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부도덕한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 위해서는 본조례 부칙 제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지난번 회의때 부결된 안건이며 부결에 동조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정수 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번호 40
----------	------------

제안 이유 : 1992. 9. 24.

제안자 : 배영일 의원외 10인

## 수정 이유

0. 본 조례안중 부칙 제2조 2항의 영업 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내용을 특정 업체에게 특혜 소지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수정내용)

0. 부칙 제2조 (영업 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2항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를

"영업 허가 정수를 조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함.

#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부 칙</p> <p>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p> <p>① 생 략</p> <p>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p>	<p>부 칙</p> <p>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p> <p>① 생 략</p> <p>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 구청장이 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정수를 조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p>